

[14 차시] 알아두어야 할 한국의 여성정책

[학습내용-1] 여성정책전담기구의 변천과 가족정책

1) 여성정책전담기구의 변천

(1) 정부 제2장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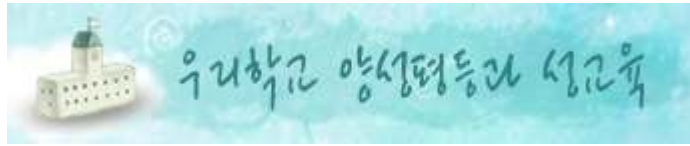
- 1988년 설치
- 초기 국가여성기구의 제도화
- 각 부처간 여성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정부기능에 제한됨,

(2)여성특별위원회 설치

- 대통령직속위원회로 1998년에 설치
-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목적으로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총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
- 기획조정업무 외에도 여성발전기본법상의 기본시책 시행을 위한 제반 조치, 남녀평등촉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한 대통령자문을 주요 기능으로 함
-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 설치
- 준 입법권, 준 사법권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총괄권이 없다는 한계점

(3)여성부

- 2001년 1월 출범
- 여성정책의 종합적인 기획, 정책개발 및 차별시정기구이며 업무영역은 크게 1) ‘정부 내 전 부처에 걸친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을 하면서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이 남녀평등하게 수립되도록 정책과정을 점검, 평가, 분석 및 개선을 요구하고, 지자체와 연계조직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며 2) 여성인적자원을 적극 개발, 활용하고 3) 차별과 폭력의 철폐를 위해 정책, 교육, 피해자보호 등 인권보장기능 4) 평등, 발전, 평화, 통일을 위한 국제연대, 비 정부기구, 정부부처와의 협력이다. 여성부는 정부 최고집행기관의 위상을 가지면서 라인(line)부서의 기능(sectoral function)과 성평등정책을 주류화하는 총괄적 기능(oversight function)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초대 여성부장관으로는 한명숙 장관이 임명되었다.
- 집행권과 입법권을 가지고 있었음.



[14 차시] 알아두어야 할 한국의 여성정책

2) 가족정책-호주제도 폐지

(1) 개정배경

-호주제는 민법 중 가족법(4편 친족과 5편 상속)에 법제화된 제도로써 아들 중심의 부계계승주의를 제도화하여 남아선호를 법적으로 조장하고 있었다. 호주제도는 여성, 특히 이혼과 재혼에 임하는 여성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형태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또 한국정부가 1984년에 비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특정조항과 국내법 간의 불일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보충설명) 호주제는 호적을 통하여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서류상의 가족을 만들어낸다. 호주제상의 가족이란 호주와 그 호주의 가에 속한 가족원들이며 실제 거주여부와는 무관한 호적상의 가족이다. 또 아들의 승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딸만 있는 소가족시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2004년 현재 딸만 있는 가정 220만 가구, 민법 948조에 따르면 가족 내의 직계비속 남자는 가족내의 모든 여자에 비해서 호주승계의 우선권을 가진다)

(2) 과정

-호주제 폐지에 대한 여성계의 의지는 1970년대 여성단체협의회, 가족법률상담소등의 여성단체를 통해 제기되었고 1997년경부터 여성운동권에서 다시 제기됨. 호주제도는 주로 남녀성비의 불균형, 남아선호사상, 태아감별 낙태 등의 문제제기 속에서 의제화

-우선 부계계승주의와 관련하여 동성동본 혼인에 관한 의제가 논의되어 1996년 한 해 동안 동성동본자 혼인신고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혼인에 관한 3차 특례법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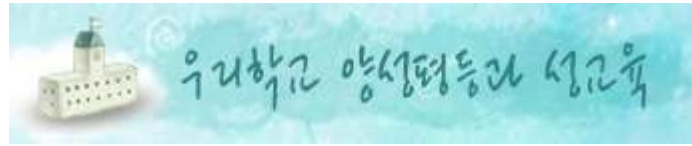
-1998년 8촌 이내의 혈족 등 가까운 친척간의 혼인만을 금지하는 새로운 금혼범위를 설치하고 친양자제도 등이 마련된 4차 개정안 국회에 제출, 통과되지 않다가 2003년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에 포함, 2004년 6월 정부안으로 제출된 민법안이 2005년 3월에 통과, 2008년부터 호적제를 없애고 새로운 가족부가 실시됨.

(3) 내용

-우선 호주제도 조문이 모두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제4편(친족편)2장의 종전의 호주와 가족이라는 제목을 삭제하고 대신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으로 하고 있다.

-자의 성과 본에서 있어서는 선정에 있어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모성을 따를 수 있는 길을 확대하고 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



[14 차시] 알아두어야 할 한국의 여성정책

렸다. (이는 어머니의 재혼 시 전혼에서 낳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친양자제도 마련: 입양과 함께 이전의 친부모 및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여 양부나 양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출생할 때부터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하는 제도.

(4)의미

호주 제 폐지는 그 동안 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계체계에 대해 민관이 합동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운동의 분기점이라 할 만큼 의미가 있다. 즉 현실과 동떨어져 있던 법적인 가족제도를 현대적인 가족에 맞도록 현실화한 의미도 있다.

[학습내용-2] 고용 및 모성보호 정책 -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1) 제정 배경

-1980년대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력 수급의 부문간 불균형, 국제적 경쟁심화와 서비스 직종 노동력 부족으로 곤란을 겪었으며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인적 활용이 요구되던 시기, 국가는 인적자원의 활용 면에서 성차별에 관한 정책마련에 착수

2) 제정

-1987년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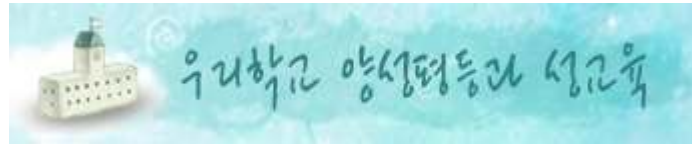
-내용: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 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성을 기준으로 한 직접적 차별을 규제함

-의미: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한 노동기회를 제공하고 법적 보호와 공정한 과정 확립을 강조하여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려는 준거를 확립함

3)개정작업

-1차 개정: 1987년,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임금 규정과 차별정의 규정을 추가, 성차별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등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지침을 마련하는데 역점.

-2차 개정: 1990년대 들어 신인사제도, 여성고용 불안정화 등 세계화 정책에 발맞추어 새롭게 제기된 성차별 행위들에 대한 대응책 미비로 여성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



[14 차시] 알아두어야 할 한국의 여성정책

전개, 1995년에 2차 개정, 채용 시 성차별 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기타 근로조건 에서의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에 대해 국가인식을 강화시킴, 여성노동자에 한해 가능했던 육아휴직 대상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로 확대하여 양육에 대한 남녀의 공동책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전기 마련

-3차 개정: 1999년 통과, 성희롱에 대한 법적 조치 필요성이 확대되는 사회적 배경. 내용은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로 본다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간접차별 개념을 도입

보충설명) 3차 개정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배제하여 인사나 복지상의 성차별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고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묘하게 재현되는 불평등 현실을 시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모성보호관련 개정: 2000년 6월부터 제출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에 대한 개정안이 논의를 거쳐 2001년 4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1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내용은 산전산후 유급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둘째, 현행 무급휴가인 육아휴직 시 1년 한도에서 고용보험 재원으로 통상임금의 30%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보충설명) 2000년 6월 김정숙의원외 132명이 개정안을 제출했고 2000년 11월 한명숙의원외 117명이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2000년 12월에는 이상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성보호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재계와 여성계간의 대립이 첨예했는데 핵심쟁점은 비용에 관한 것이었다.

3. 성 관련 정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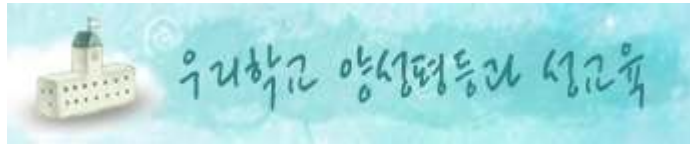
1)제정배경

-1980년대 말에 발생하기 시작한 엽기적 성폭력 사건들(김부남, 김보은 사건)과 이에 대한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국가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함, 또 여성문제만을 전담해서 다루는 여성기구가 생겨났으며(정무 제2장관실) 1994년에는 국회 내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20명 이상의 의원이 모여 여성문제관련 입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성문제에 관한 법·제도들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1997년 11월에 가정폭력방지법 통과되어 98년 7월부터 시행



[14 차시] 알아두어야 할 한국의 여성정책

-성희롱에 관해서는 1999년 2월에 통과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과 2월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규제

-2000년 7월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피해자로만 보고 형사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며 10대 매매춘을 한 남성상대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 포함.

-2004년 3월 성매매방지법 제정: 2002년 군산 집창촌 화재사건을 계기로 여성운동권에서 제기하고 입법부가 적극적으로 부응

-윤락행위라는 도덕적 용어 대신 성매매라는 중립적 용어를 채택,

선량한 풍속의 보호가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함.

성매매를 성판매자와 성구매자간에 벌어지는 사태로 접근하는 데서 벗어나 성매매 강요, 알선, 중개를 포함하는 3자 관계의 문제로 접근함으로써 사회구조적 접근의 성격을 띠

보충설명) 법제화 과정을 보면 김부남, 김보은사건,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등 성폭력, 성희롱사건, 군산집창촌 화재사건 등이 발생하면 여성운동이 먼저 나서서 이를 사회이슈로 부각시키고 담론화시키며 의제화하였다. 그 후 입법부는 이를 기반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법제화시키는 과정을 밟고 있다.

3)의미

성 관련 정책들의 입안 과정을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청소년성매매, 성매매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순서를 보면 보다 명시적이고 뚜렷한 이슈에서 출발하여 점점 보다 미묘한 문제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관점 또는 담론의 변화를 보면 1980년대까지 보호의 관점과 담론이 주류를 이루다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평등의 관점이 보여지고 90년대 말에는 여성의 차이를 강조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이 나타난다. 이는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입법부에도 여성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